

민선 5기, 대전 시정의 전망과 과제

- 경제분야 -

정순오 한남대학교 교수

1. 서론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연말연시의 관심은 한국경제의 더블딥(double dip)^{*1}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한국경제 자체가 건실하다하더라도 수출의존성이 큰 만큼 세계경제의 더블딥 파고를 한국만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더블딥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써야 할 타이밍에 관한 논의도 뜨겁다. 이미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2009 예산 국회는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둘러 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과연 이런 대형 토목사업이 시급한가의 문제부터 그 경제적 과급효과를 둘러싼 논쟁과 재정 불균형에 관한 우려까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정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

또 미국발 주택금융위기로 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속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부양 효과에 주력해 왔지만 그 지속가능성과 건실성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기적인 경제지표의 상승 효과와 “부익부빈익빈” 심화^{*2}라는 외화내빈의 정책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은 이런 논란의 와중에 시작됐고, 상반기에는 제5기 지방자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 해 우리 경제의 더블딥 현상 도래를 서둘러 인정하고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작년까지 양적인 부양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부양, 재정 승수 효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1 W자형 경기변동 형태 : 일시 회복 후 재침체 현상

*2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2003년 0.292 수준이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8년 0.3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빈곤층이 대거 양산됐던 1998년 0.3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누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통계가 시작된 2005년 8.31에서 2008년 8.67까지 벌어졌다. 반면, 97년 51.5%이던 소득수준 기준 중산층 비중은 2007년 43.7%로 10년 사이 7.8%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19.9%에서 26.3%로 크게 늘어난 저소득층으로 흡수된 것이다(한국일보 2009. 12. 20).

있는 것이다.

대전은 흔히 소비경제의 도시라고 부른다. 전국적인 중심성을 가진 기반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영향권내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의 소비력에 경제력의 대부분이 달려 있다는 의미다. 권역내 소비지출여력은 국가적 거시경제 지표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변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 같은 차원에서 도시내 기업들이 기반산업이든 비기반산업이든 국내 경기변동과 무관할 수 없다. 결국 연구개발형 창의적 기업들의 성과 정도나 경기변동과 무관하면 무관했지 대부분의 도시경제 변수는 거시 지표들의 변동에 종속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지역경제 난관의 타개 해법은 따라서 지극히 제한적이다. 정부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 내거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외부 투자를 많이 유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의형 기업들의 성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정도다. 그러나 창의형 기업들의 효과는 그 성과가 온전히 지역경제 내부에서 재순환된다는 전제아래에서만 그렇다.

제4기 대전의 경제시정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즉, 대덕연구개발특구에 1,467만㎡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최근 3년간 228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지난 2006년 1,800만달러(25억원)에 불과했던 외자 유치액이 지난 3년간 73억7천여달러로 39배가 늘었다는 것이다(손규성, 한겨레신문 2009. 6. 29). 다만, 외자 유치액은 완전하게 투자가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양해각서(MOU) 정도의 잠정적인 의사 표명액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외부 투자는 공장설립에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 2-3년은 족히 걸리므로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쨌든 이런 성과들의 효과가 조속히 차질없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제4기 시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간중 객관적인 지표는 외부 거시 지표들의 영향 때문인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경제고통지수는 전국 상위권에 랭크됐고, 도시인구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돼 가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는 최근래 더욱 악화된 실정이기 때문이다. 생활경제고통지수가 높은 이유는 체감실업률이 높은 탓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인구의 슬정이를 차지하는 대학생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도시 속성장 청년실업난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대부분 서민 소비 지출력과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경제구조상 고용불안과 신 유통업태에 의한 서민생계형 업종 잠식, 그리고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중소기업 환경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한 경제 회복도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비껴가지 못하고 있다³. 도시경제가 단순히 소비경제력에만 의존한다면 안정적인 도시 인구를 늘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외부적으로 고용을 유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밖에 없다. 대전은 유희 토지지원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간집약적이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많이 유치하든지, 아

*3 2009년 12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3분기 말 매출액과 직원 수 비교가 가능한 상장업체 54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은 83만1731명으로 지난해 말(83만3336명)보다 0.2% 감소했고, 5년 전(84만8623명)보다는 2.0%가 줄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매출액은 지난해 796조6954억 원으로 2005년(603조4663억 원)보다 32.0%가 증가했다고 한대(동아일보, 2009.12.21).

니면 주변 지역에 창출된 고용인구의 정주인구화를 촉진하는 주거환경 경쟁력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창의형 기업의 경우 기반산업으로서 전국적인 중심성을 갖고 전문화의 정도가 큰 기업이 절실하다. 대전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의 연구개발여건을 갖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성과를 산업화하는 기회는 수도권에 누출되는 비율이 높다.

대전경제의 지리적 이점은 수도권 경제의 확장영역 외곽에서 비수도권을 잇는 절절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점도 점차 천안-청주권과 나누어 가져야하는 광역도시권역에 수용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효과와 더불어 차별적인 전문화가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돼가고 있다는 말이다. 주요 변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

2. 대전의 생활경제고통지수

LG경제연구원이 매년 작성해 발표하는 지역별「생활경제고통지수」평가에서 대전은 2008년 전국 16개 지역중 광주(13.0), 울산(12.6)에 이어 같은 값(12.6)이지만 3위를 차지했다. 대전은 2003~2008년 5개년 평균에서도 서울(12.1), 광주(11.4)에 이어 11.2로 3위를 차지했으며, 이 순위는 2003년 8위 → 2004년과 2005년 4위 → 2006년 2위에 이어 2007년 3위와 같은 순위로 대체로 악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별시, 광역시만의 비교에서도 대전은 2008년 순위(12.6/3위)에서 인천(12.2/7위), 부산(12.1/8위), 서울(12.1/9위), 대구(11.7/13위)보다 높은 순위다. 또한 2003~2008년 5개년 평균에서도 대전(11.2/3위)은 같은 광역시중 인천(11.0/4위), 부산(10.5/8위), 울산(10.4/9위), 대구(10.3/10위) 보다 높은 수준이다.

「생활경제고통지수」는「경제고통지수」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경제고통지수」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특정시점의 경제상황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이후 IMF 같은 국제기구나 경제연구기관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을 고통지수(Misery Index)로 측정해 매년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이고, 실업률이 4%이면 고통지수는 7이 된다. LG경제연구원의「생활경제고통지수」는 이런「경제고통지수」구성 지표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생활물가상승률」로, 「실업률」을 「체감실업률」로 대체해 이 둘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생활물가지수」는 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54개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고, 「체감실업률」은 주당 근무시간

17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기존의 공식 실업자 수에 포함시켜 계산한 실업률이다. 따라서 「생활경제고통지수」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과 불완전한 고용상태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고통지수」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의 공식 실업률은 2008년 기준 3.58%로 서울의 3.9%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2008년 대전은 「생활경제고통지수」에서 12.6(3위)으로 서울의 12.1(9위)에 비해 높았다. 이런 결과는 5개년 평균에서 서울(12.1/1위)이 대전(11.2/3위)보다 높았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대전의 상황은 시간적으로 악화돼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3~2008년 5개년 평균 최고치와 최저치간 편차는 3.4(서울 12.1~경북 8.7), 평균값은 10.7이다. 「생활경제고통지수」가 체감물가와 고용안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생활 물가와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 대전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3~2008년 5개년 평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 지역 평균 4.2로 최고치(광주 4.3)와 최저치(인천 3.9)간의 편차는 0.4에 불과하며 대전은 4.2를 기록했다. 반면, 체감실업률에서는 대전은 서울(8.0)에 이어 인천, 광주와 함께 7.1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기록했다. 5개년 체감실업률 전국 지역 평균은 6.5, 1위 서울(8.0)과 16위 경북(4.6)간의 편차는 3.4였다. 결과적으로 대전의 생활경제 고통의 원인은 고용불안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편 대전의 「생활경제고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두고 대전의 인구증가율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영향으로 타 도시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보도도 있다(오마이뉴스 2007.2.16). 그러나 대전의 인구증가율은 전년대비 2005년 0.8%(총인구 증가율 0.21), 2006년 0.27%(증가율3), 2007년 0.68%(증가율3), 2008년 0.06%(증가31)로 통계청이 작성한 2005~2010 기간중의 평균 인구성장률 0.30%에 비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압도적인 증가 편차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산업연구원이 2008년 말 현재 「경제고통지수」를 조사했더니, 대전이 8.44p로 인천 8.54p, 광주 8.70p, 울산 9.43p, 대구 9.50p, 부산 9.53p를 제치고 가장 낮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지표상으로 2006년 대전이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11.0)과 경기(10.5)보다도 높았던 기록과 대비해서는 씩 호전된 성과라고 봐주기에는 흔쾌하지 않은 상황이다(한겨레신문 2009. 6. 29 보도).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생활경제고통지수」와 「경제고통지수」는 지수 계산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고통지수」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생활경제고통지수」의 악화 현상을 뒤집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공식 실업률의 허구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보도도 있었다. 즉, OECD가 발표한 2007년 한국의 실업률은 3.2%로, 아이슬란드(2.3%), 노르웨이(2.5%)에 이어 실업률이 세번째로 낮은 국가였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3.9%로, 30개 OECD 회원국 중 고용률 순위가 하위권인 21위에

랭크됐다. OECD 평균치는 66.7%였다. 통상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관념을 깨고 우리나라는 저(低) 실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실업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취업자 수가 동일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고용률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교도소 수감자 등을 포함한다.

실제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2.9%로, OECD 평균인 27.7%보다 높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대부분 20%이내였고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터키 등 동유럽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이었다. OECD는 고용사정을 판단할 때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고용율은 성별로는 남성이 74.6%인 반면 여성은 53.2%로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25세 고용률은 25.7%로 30개국 중 26위, 26~54세 고용률은 74.0%로 27위 등 최하위권이었지만 55~64세의 경우 60.6%로 상위권인 8위를 기록, 고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연주, 헤럴드경제 2009. 7. 21).

우리나라의 나쁜 고용율은 결국 청년 실업 악화현상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이런 실업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장실업률이라는 새 지표가 주목받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통계청이 매달 15일이 포함된 1주일간에 걸쳐 약 3만200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로,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동시에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했다고 답한 이들을 실업자로 계산한 것이다. 이런 조사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자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제는 공식 실업률이 고용시장의 긴박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사실상 「실업자」에 속하지만 공식 실업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실업지표의 대표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 예컨대 단기 계약을 맺어온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실업상태에 처하더라도 고용보험 수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 구직활동에 나서기보다는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공식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개발한 보완지표가 「확장실업률」이다. 확장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숨어 있는 실업자와, 취업자 가운데 숨어 있는 실업자들을 모두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에는,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린 실망실업자와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이나 학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준비자를 더 하고, 여기에 취업자 가운데서도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부분 실업자)을 보태는 방식으로 확장실업자 수를 추산하는 것이다.

이런 계산법에 의해 추산한 2009년 7월 확장실업자 수는 245만1000명이며 확장실업률은 9.5%이다. 같은 달 공식 실업자 수 92만8000명과 공식 실업률 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숨어 있는 실업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실업대책이 효과적인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말한다(황보연, 한겨레신문 2009. 8. 16). 한 마디로 세계 최저 수준의 공식 실업률은 허구라는 뜻이다. 결국 실질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회복 상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한국 실업통계의 문제점,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 2009. 6. 8).

그렇다면 대전의 「생활경제고통지수」가 전국적으로 높은 순위라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처지의 도시들간 지수 차이는 오십보백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체감실업률 논의에서 보듯이 실질 고용률이 낮다는 문제의 근본 해결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 주부, 노년층 인구들의 안정된 고용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보장하지 못한다면 대전의 도시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대전의 인구와 산업

3.1 인구와 전출입 동향

2009년 9월 현재 대전인구는 149만8천명이다. 대전인구는 전년대비 2005년 0.8%, 2006년 0.27%, 2007년 0.68%, 2008년 0.06%, 2009년 1.42% 증가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 도시화율이 90.5%임을 감안하면 대전의 도시인구 성장세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9년 인구성장률이 0.3%대 이하로 떨어

어진 후, 2012년에는 0.2%대 이하로, 그리고 2015년에는 0.1%이하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대전의 전국 인구 구성비는 2004년 3.0%에서 2005년 3.1%로 증가한 후, 2015년경 3.2%로 진입해 거의 고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www.kosis.kr). 대전은 2005년 전국 인구 구성비에서 광주를 앞질러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전국 제5위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추산에 의하면, 대전인구는 2010년 151만5천명을 초과하여, 2015년 155만 4천명, 2018년 157만명을 넘어 2026년에 1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즉, 2009년 현재 대략 150만명의 대전 인구가 160만이 되는 데에는 15년 이상이 족히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대전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대전의 인구는 자연증가에 의해 2020년 170만명에 도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확정된 국책사업에 의해 30만명이 사회적으로 증가해 200만명이 된다는 것이다. 30만명의 사회 증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10만명, 대덕연구개발특구 15만명, 서남부생활권 1단계 개발과 노은2, 학하, 덕명 등지의 개발로 3만8천명 등이 유입된다는 가정이다. 이런 계획 인구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자연증가 인구가 통계청 추산과 괴리가 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이 표류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이 향후에도 온전히 외부 인구 유입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 보면 대단히 낙관적인 인구 전망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07 연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대전 인구는 지난해 타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9만6000명, 전출 9만7000명으로 1000명 순전출을 기록했다. 주요 전출지는 충남이 24.8%로 가장 많았고 경기(20%) 서울(18.4%) 충북(10.2%) 전북(5.4%) 순으로 나타났다. 전입지는 절반에 가까운 4만370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이곳으로의 전출자 3만 4387명에 비해 5983명 많았다. 대전시 전출입인구가 순전출이 많아진 것은 주택경기 침체 및 토지거래 규제에 따라 전입 요인은 줄고 20대 연령 계층의 취업으로 수도권 전출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전출입 요인은 직장이동 50%, 주거요인으로 인한 이동이 2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구이동은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통계청의 2006년 인구이동통계결과에 의하면 대전은 최근 10년간 전출입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양대 지역으로 경기도와 함께 널리 손꼽혀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증가율도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구증감에 있어서도 순전출지역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의 요인이외에도 기업이나 공장 등의 교외이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도시환경 부적격 시설들이나 확장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도시외곽 이전으로 이전적지는 손쉽게 아파트단

지화 되지만 도시내부의 인구이동만 증가하는 요인이 될 뿐 도시외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대전의 산업별 취업 인구 구성에 있어 광공업 인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다.

3.2 산업별 취업인구와 경제활동참여율

대전의 취업인구는 70만1천명, 산업별 취업인구는 2007년말 통계로 1차 산업 1.5%, 2차 산업 11.7%, 3차 산업 86.8% 구조이다. 취업인구는 전년대비 2006년 2.3%, 2007년 5.4%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8년 0.4%, 2009년 0.1%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서울의 2008년도 산업별 취업인구 비율은 농림어업 0.08%, 광업제조업 12.3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87.59%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광공업 비중이 대전이 낮을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여율은 2008년 기준 서울이 62%수준인데 반해 대전은 59.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시도 평균이 61.5%, 최고는 제주 68.8%(1위), 최저는 부산 57.3%(16위), 서울은 7위, 대전은 12위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표 1
대전광역시 인구 및
경제지표 현황

항목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
1. GDP(국내총생산)	십억원	779조380	810조515	857조443	912조176	1023조900	연말통계
2. GRDP(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9조314	20조030	20조802	22조186	-	*
- 1인당 GRDP	달러	11,561	13,318	14,743	16,060	-	*
3. 인 구 수	천명	1,450	1,468	1,477	1,487	1,496	1,506
- 경제활동인구	천명	677	676	694	724	726	726(09.9)
- 취업자	천명	649	646	661	697	700	701(09.9)
4. 대학교 (학생수)	개/명	16/ 148,433	16/ 146,814	18/ 148,704	17/ 168,036	17/ 147,020	연말통계
5. 경제활동별 생산구조	%	1) 0.4 2) 19.1 3) 80.5	1) 0.3 2) 17.0 3) 82.7	1) 0.2 2) 17.0 3) 82.8	1) 0.2 2) 17.6 3) 82.2	-	1)농림어업 2)제조업 3)서비스업 및 기타산업
6. 산업별 취업구조	%	1) 1.5 2) 12.3 3) 86.0	1) 1.7 2) 12.5 3) 85.8	1) 1.7 2) 12.1 3) 86.2	1) 1.5 2) 11.7 3) 86.8	-	1)농림어업 2)광공업 3)사회간접자 본및기타산업

* 자료-대전광역시, 인구는 2009년 12월 발표 통계청 자료임

3.3 지역총생산과 경제구조

대전의 지역 총생산 전국 비중은 2.3% 규모로 광주와 비슷하고 서울의 1/12, 부산, 인천, 울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생산구조로 보았을 때 특성이 다른 울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비슷한 생산구조의 부산과 대구와는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규모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구조가 비슷하지만 광업 및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비중은 대전이 크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서울이 크지만 엇비슷한 생산구조로 가정했을 때 대략 인구 규모로 비교해 보면 대전은 서울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력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조다. 즉, 대전과 비슷한 광역시의 취약점은 서비스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해 서울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해야한다는 과제를 얻을 수 있다.

지출구조로 봤을 때 대전은 정부 소비지출 비중이 타 도시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건설투자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으며, 민간 소비지출과 설비 투자는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다. 건설투자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보다 낮다는 것은 대전의 도시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생산지수의 변동으로 보았을 때 대전은 부산, 인천, 광주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다. 서울에 비교해서도 약간 부진한 편이고, 대구와 울산과 비슷하게 부진하다. 서울이 생산구조로 보아 제조업의 비중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전은 대구, 울산과 함께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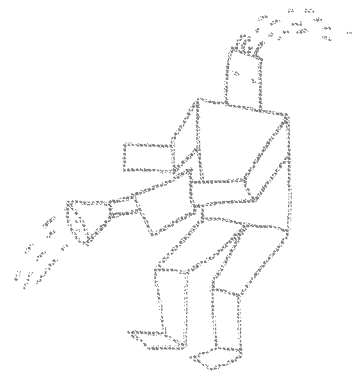


표 2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실질성장률 및
지역경제비중
(단위: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순위	지역경제비중
서울특별시	19.43 (0.3)	19.82 (0.8)	20.87 (1.3)	21.97 (2.6)	23.59 (5.2)	5	24.1
부산광역시	12.03 (4.5)	12.7 (0.7)	13.4 (2.4)	13.91 (2.5)	14.94 (4.9)	13	5.4
대구광역시	10.33 (2.0)	10.95 (1.0)	11.47 (2.9)	12.18 (2.6)	13.06 (4.9)	16	3.3
인천광역시	14.14 (2.8)	15.12 (3.5)	15.67 (4.2)	16.68 (5.3)	18.29 (5.6)	8	4.9
광주광역시	11.47 (0.7)	12.05 (2.6)	13.09 (5.4)	14.07 (4.2)	14.73 (4.9)	15	2.2
대전광역시	12.57 (7.3)	13.23 (1.6)	13.64 (1.0)	14.09 (2.3)	14.92 (3.9)	14	2.3
울산광역시	33.43 (3.5)	38.4 (9.1)	38.97 (2.2)	40.22 (5.3)	44.51 (4.3)	1	4.9
전국평균	(3.3)	(5.0)	(4.0)	(5.2)	(5.0)		

*주: 16개 시도중 광역시만 편집함 자료-통계청

표 3
지역내 생산구조 및
지출구조(2007)
(당해년 가격기준, %)

	생산구조					지출구조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건설투자	설비투자	
서울특별시	0.2	5.1	4.8	89.0	60.7	11.4	12.4	5.7	
부산광역시	0.9	17.5	7.5	71.5	69.4	13.8	17.3	6.9	
대구광역시	0.5	20.0	8.5	69.7	75.1	18.4	19.0	6.8	
인천광역시	0.6	30.1	8.6	58.0	55.8	12.4	20.9	6.6	
광주광역시	1.0	24.4	7.9	65.1	68.2	15.8	17.8	7.4	
대전광역시	0.2	14.8	6.4	76.7	72.4	32.6	14.4	7.4	
울산광역시	0.4	66.3	6.5	24.9	25.3	4.4	13.3	8.5	

*주: 16개 시도중 광역시만 편집함 자료-통계청

표 4
산업생산지수
(2005=100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I	2009/II
전국	100.0	108.4	115.8	119.1	102.7	117.4
서울	100.0	110.0	108.8	99.4	88.0	88.5
부산	100.0	108.3	119.2	121.7	107.1	113.2
대구	100.0	104.1	109.1	106.8	87.9	93.3
인천	100.0	106.6	112.1	111.6	85.7	91.9
광주	100.0	113.4	122.9	113.6	88.7	120.3
대전	100.0	104.6	108.8	103.7	86.2	97.3
울산	100.0	101.8	104.0	108.2	101.6	114.3

자료: 통계청-공공업동태조사

이와 같은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대전은 점점 광공업의 비중이나 생산 활력이 떨어 저가는 도시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대전은 제조업이 입지하기에 토지자원도 부족 하고 용지가격도 인근 시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산업화 여건은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 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입지만이 살 길 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3.4 연구개발중심 창의형 기업 동향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대신 기대할 수 있는 대전의 경쟁력은 연구개 발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의 영향으로 R&D 집적지이자 벤처비지 니스의 생태계가 선도적으로 형성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대전은 연구개발비 비중과 순위에 있어 전국의 11.44%, 전국 3위 규모다. 그러나 연구원 수나 연구조직 수에 있어서는 그 비중과 순위가 연구개발비 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구조를 보인다. 연구원 수의 비중은 전국 비중이 7.48%에 불과 하며, 연구조직 수는 4.66%에 전국 순위는 경남, 인천에 이어 5위에 머무르고 있다. 연 구조직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을 가리키는데 연구조직 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산업체의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개발비중이 전국 3위라고는 하지만 1위 경기(39.28%)의 1/3에도 못 미치고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비중 60.07%에 비교해 본다면 1/5도 되지 못하는 비중이다. 한 마디로 규모면에서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런 구조는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자리 잡은 경남과 인천과 비교되는 또 다른 취약성이 대두된다. 같은 지역권에 속하는 충남 등이 5% 안팎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차지하면서 도 연구조직의 수에 있어서는 대전에 필적하는 잠재적인 성장성에도 뒤떨어지는 구조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5
지역별 연구개발비,
연구원 및 연구조직 수
(단위: 억원, 명, 개, 전국백분율: %, 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연구개발비	71,747 (20.79)	7,423 (2.15)	5,080 (1.47)	11,777 (3.41)	5,004 (1.45)	39,476 (11.44)	4,114 (1.19)	135,505 (39.28)	2,576 (0.75)
	2	8	11	7	12	3	13	1	15
연구원 수	89,928 (27.64)	10,204 (3.40)	7,442 (2.48)	11,080 (3.69)	5,696 (1.89)	22,448 (7.48)	3,480 (1.15)	96,747 (32.24)	4,143 (1.38)
	2	8	10	7	11	3	14	1	13
연구조직 수	3,573 (25.62)	628 (4.50)	556 (3.98)	774 (5.55)	295 (2.11)	651 (4.66)	172 (1.23)	4,104 (29.42)	202 (1.44)
	2	7	8	4	11	5	15	1	14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연구개발비	6,434 (1.86)	17,255 (5.00)	6,154 (1.78)	3,287 (0.95)	14,106 (4.08)	14,240 (4.12)	803 (0.23)	344,981 (100%)	
	9	4	10	14	6	5	16		
연구원 수	7,696 (2.56)	13,772 (4.58)	5,300 (1.76)	2,683 (0.89)	12,916 (4.30)	12,596 (4.19)	919 (0.30)	100%	
	7	4	12	15	5	6	16		
연구조직 수	519 (3.72)	650 (4.66)	277 (1.98)	213 (1.52)	482 (3.45)	785 (5.62)	64 (0.45)	100%	
	8	6	12	13	10	3	16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2008년 통계연.

결과적으로 대전은 연구조직의 수를 늘리고 전국 비중을 확대해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R&D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확장과 성장을 향해 전국적인 분가 이전이 시작된 대덕단지 연구기관들의 동향을 살펴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기술중심지가 될 수 있는 전문화된 분야를 선택해 집중해야만 다급함도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35 대전의 주택시장과 도시재생

도시경제가 가계소비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면 외부 인구를 유치하는 도시 주거환경의 경쟁력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 요소이다. 대전은 전국 어느 대도시보다도 주택사정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고 주거 선택의 중요한 부수 요소인 교육환경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대전은 도시 내부적으로도 주택시장이 이원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도시내 지역격차가 큰 곳이긴 하지만 어느 곳이든 비교적 주택 수요가 원활한 곳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택가격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인구 유입의 매력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주택소비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 도시내 인구

이동을 정체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차이가 커서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거듭되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전은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가격이 분양가격을 턱없이 밑도는 곳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가격지지가 곤란한 형편이다. 그 이면에는 105%에 육박하는 주택보급률도 문제지만 소득 정체로 인해 도시내 인구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택소비 활동이 부진한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대전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줄곧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해 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특·광역시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한 경향을 찾아 내지 못할 정도로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침체된 지방 대도시들과 달리 경제활동이 그나마 활발한 인천, 경기 지역과 서울의 그것들은 비교적 '다이나믹' 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시장 환경은 초기 유입에는 유리하지만 지속적인 유입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며,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곧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계소득의 확대 창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2004		2005		2006		2007		2008	
시도평균	-1.81	-	2.86	-	5.35	-	1.33	-	2.08	-
서울	-1.40	9	6.32	2	18.87	2	5.42	2	5.03	2
부산	-4.14	14	-1.14	15	-0.62	14	0.20	9	2.54	5
대구	-1.58	10	7.65	1	1.56	9	-1.83	15	-2.24	16
인천	-4.42	15	-0.28	13	11.41	4	11.81	1	13.55	1
광주	1.35	3	4.12	6	3.15	7	-0.13	11	1.25	8
대전	0.28	5	2.12	12	-0.74	16	-1.13	13	0.66	12
울산	1.28	4	3.97	7	14.80	3	2.69	4	-0.79	13
경기	-4.07	13	5.54	3	24.77	1	4.02	3	2.32	6

자료: 통계청, 지역DB

주택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에 대해 종전 주택보급률 계산에서 제외되어 온 일인가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계산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새 방식에 따른다면 대전은 2008년 주택보급률이 종전 방식으로는 104.9%이지만 새로운 산정방식으로는 98.5%로 약간 낮아진다. 전국 보급률도 종전 109.9%에서 100.7%로 낮아진다(대전시 It's 주택정보, 2009). 그러나 일인가구의 몇 퍼센트가 최소한 핵가족 구성을 전제로 생산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또 선진국과 같이 고소득에 별장문화가 발달해 1가구 2주택이 보편화된 국가가 아니고서는 단순 통계수치상의 조작만으로

로 주택보급률을 낮춘다고 해서 1가구 다주택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설득 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구 유입이나 자연 증가가 정체된 도시에서 주택소비의 촉진과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정주 가구의 가계소득의 획기적인 증대 또는 평균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유입 없이는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주택의 확대 매매를 통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가계 동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미국의 주택금융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이 이미 세워진지 오래인 것이다. 다만, 수도권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고밀도로 집중돼 있고 자본과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7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사업구분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1단계	2단계	완료
면적(m ²)	699,250	2,147,124	2,011,630	984,853	1,311,992	61,148,582
계	11	37	36	12	13	22
추진 단계	추진위구성	8	16	25		
	정비구역지정	2	13	4		
	조합설립		6	2		
	사업시행인가	1		2		
	관리처분계획		1			
	착공		1	1		
	준공			2		

자료: 대전광역시 2009.12 현재

대전에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통칭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준공이나 착공 구역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사업에 착수된 곳이 74곳에 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기본계획고시 2006. 6. 30)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이 202곳에 면적은 11.72km²에 이른다.

가장 크게 우려해야 할 문제는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도 활발한 가운데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쏟아질 주택물량이 언제 어떻게 소비될 것인지, 또 그것이 기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있게 단언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다는 데 있다.

사업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는 관련법령에 기계적으로 따를 뿐이라고 하고,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막연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비사업자들과 건설업체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주택재건축조합과 결코 평등하지 않은 계약과 불확실한 사업전망속에 일종의 비즈니스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래도 주택시장이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재건축에 뛰어든 원주민들의 20%미만 정도만이 재정착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재정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8.8%(난곡재개발), 2002년 이후 서울에서 시행된 5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평균은 재개발 44%, 재건축 64%, 길을 뉴타운 17.1%로 알려져 있다.

대전의 경우 현재 정비계획상 정비구역 202곳에 면적 11.72km²이니, 한 개 조합의 평균 면적은 58,000m² 정도가 되는 셈이다. 얼핏 따져도 모든 정비구역이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할 때 기존 시가지 부문에서만 대략 20만채 안팎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대전 경제력이 과연 이런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무리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4. 결론

앞서 몇몇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듯이 대전은 다른 주요 지방 대도시들과 함께 최근래 경제적으로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오래전 국가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최근래 미국발 주택금융위기까지 외생 변수의 영향도 컸었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극복과정에서 대기업과 자본 위주의 성장에 의존하다 보니 경제규모는 확대된 반면 내용은 양극화와 실업난이라는 매우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른바 ‘봉급장이’ 들 중심의 도시경제라면 당장 악화되지도 않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좋아진다고도 볼 수 없는 전망을 버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제를 키우는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전은 한국 경제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의 중심지가 될 수도 없다. 토지자원도 없고, 국제무역이 용이한 접근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대전이 그동안 늘 내세워왔던 과학기술 도시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그리고 창의적인 R&D 기업들이 도시경제를 견인해 가는 그런 오래 됐지만 다시금 새로운 개념으로 재해석해야 할 연구학원도시가 그것이다.

기업유치와 관련해 역시 오래된 개념이지만 장소마케팅이라는 기법도 재음미되어야 할 과제다. 제4기 지방자치 임기에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에 감명받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운동이 대전천 복원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다른 대도시들은 한발 더 나아가 도시 디자인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서울시는 더 이상 식상한 비둘기집

모양의 아파트디자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오래다.

대전은 산업구조상 건설업의 비중을 더 키워야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장소마케팅 차원에서도 도시인프라는 혁신적인 모습을 띄어야할 정도로 열악하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저그런 대도시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제5기 민선 자치시대에는 도시 재생사업들이 붓물처럼 터져 나올 예정이다. 위기속의 기회랄까, 대전은 이제 미구에 닥쳐올 도시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엮고 대처해서 위기를 성과로 만드는 선진적인 경제 도시로 탈바꿈해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 2009, 한국 실업통계의 문제점(2009. 6. 8)
대전광역시, 2006,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대전발전연구원, 2009, 월간대전경제, 2009/10.
이장재, 2009, 글로벌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 서울경제 2009/11.
최동순, 2009, 2008 체감경기 수도권 보다 지방이 더 악화, LG Business Insight 2009/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2009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